

오늘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 청문회… 여야 공방 가열

여 “묻지마 혈투기로 정상화 방해”
“무분별한 인사 공격… 인준 협조를”
야 “조국 판박이” 자진사퇴 총공세
재산 신고 관련 추가 의혹 제기도



민의힘만나 홀로 ‘묻지마’ 혈투기에 골몰하며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것을 두고, “김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겠다는 모종의 확약이 국민의힘과 검찰 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사실관계를 멋대로 해석하고 허구와 허상으로 후보자에게 악의적인 낙인을 찍는 공작 정치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내란 동조 정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기획과 낚조에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공세를 “인디언 기우제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적어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청문회가 똑바로 안 흘러가는 거고 의혹투성이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산 형성 관련 의혹,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폈다.

특히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정도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재산 관련 문제점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 착수에 이르렀다”면서 수감 중인 조국 전 의원의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신속 수사 개시를 비판하며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 ‘김민석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총리 지명을 철회하시기를 바란다”며 “조국의 강을 건너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

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에도 차고 넘친다”며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신고된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역대 현금의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며 재산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진우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李 “중동 상황 위급… 전부처 비상대응체계”

“합당한 물가대책 강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의 이란 공격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

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삼석, 섬 주민 생활안정·소득향상 3법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은 23일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 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섬 주민 생활안정 및 소득향상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울릉도·독도 등 국도외곽 면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촉진법 개정안이다.

3법은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내륙보다 평균 5배 높은 택배·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도 외곽 면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양부남, 자율주행車 안전 도로운행 법안 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사진)은 23일 완전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운행과 국민 안전을 내용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수집·분석과 교통정보 수집·제공, ‘자율주행도로교통정책위원회’ 설치 등 자율주행 관련 경찰



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법안은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국민 생명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술 발전에 걸맞은 안전관리 체계와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상법 개정안 최대한 빨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총실 의무’ 상법 개정을 논의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을 지

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전에는 반대하는 의견이었던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개괄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제재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한 적이 있었고, 그걸 고려해서 문안을 계속 만들고 수정하고 토론하고 있다.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박찬대 당 대표 출마 “이재명 걸 지켜야”

정청래와 ‘친명 선명성’ 경쟁 본격화
일각선 과열 경쟁시 내부분열 경계도

더불어민주당 3선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사진)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정치공세 차단부터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친 긴밀하



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걸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걸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 먹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이뤄내겠다”면서 “올해 안에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지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 간 친명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단짝 조합임을 부각하며 출사표를 던진 만큼, 향후 당권 레이스는 선명성 경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두 사람이 당 대표직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과열하면 계파 내부 갈등이 불거질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당 대표 등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서울=김선욱 기자**